

“尹 정권 퇴진”…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82명 시국 선언

“민주주의 억압·민주공화국 가치 훼손”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이희성 변호사를 비롯한 전주와 익산,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변호사들이 변호 활동을 마다하고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지방 변호사회를 대표해 이희성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부끄럽다.”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 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인권유린, 검찰권 남용, 전쟁 촉발 행위 등 헌법 파괴 행위 앞에서 침묵하며, 대통령 스스로가 변화하기만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연하게도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다.”며 “그 기대가 허망한 것이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독선과 오만, 검찰 정권의 폭주는 끝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에 부끄럽다. 한때 검사와 변호사로 그와 함께 다녔던 저를 앞 한 법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논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며, “이태원 참사에 직면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 이제”라는 말은 그에게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더이상 공정·정의 이야기할 수 없어”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으로는 전국 최초

게서 통치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 재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수사의 방향이 그의 격노로 정해졌다는 합리적 의심들은 철저히 외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의 처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온 국민이 목도했음에도 사과나 반성은 없다.”고 하며, “오직 박멸하지 못한 아내가 있을 뿐이다.”며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함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서 “고속도로 노선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변경되었고, 단 한 사람의 관객 검진회를 위한 국악 공연이 있었다는 의혹 등 자신과 처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도 황제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말도 되지 않는 노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정상외교 준비 때문이라는 아귀가 맞지 않는 핑계를 대고도 뗏뗏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은 제대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 나간 의료 공백은 없으며, 응급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최근 명태군 게이트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민낯은 추하기 그지 없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그는 ‘아내가 순진하고’, ‘궁중 외압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라고 강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파괴되었다.”고 하며,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거부하는가?”라고 탄식했다.

더구나 “시행령으로 부여받은 검찰의 칼끝은 더욱 예리해졌으나, 단 한 사람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여섯 명에게 10만4,000원어치 밥을 샀다는 이유로 130회의 압수수색을 당한 후 기소되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면에 추가조작 사건으로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여사는 무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규명되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이길 반복하다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며,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너무나도 치욕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는 진일 굴종 외교, 지나치게 편향된 친미 사대 외교, 무책임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시류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게 그 자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에게 항의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비틀린 채 끌려 나간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인권은 간데없고, 대통령의 존엄은 신성불가침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법치는 형해화 되었으며, 더 이상 상식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무능은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민생은 파탄이 났으며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하는 세상, 세계는 신냉전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기후 위기는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인 시대, 우리는 시대적 도전에 맞설 지도자를 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퇴행만을 거듭했고 국민의 불안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신 제일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께 권면한다.”고 하며, “이제 그만 국정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며, “여사만 사랑하고 돌보기도 부족한 시간이 아니던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초 이 나라를 담아낼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었다.”고 하며, “민주와 정의,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추구하는 전북 지방변호사회 소속 82인의 변호사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명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목청을 높여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희성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의 주도 아래 고종운·김기태·김성중·박계성·박지원·최환석·홍호성 변호사가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이번 변호사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은 전국에서 최초이다.

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310여명 중 익명의 4명 변호사를 포함 82명의 변호사들이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및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나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속 사유는 낯소 그 자체”라며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잠적을 어찌하냐”라고 반문했다. /뉴시스

익산시의회, 내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돌입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8일 제 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익산시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8,078억원으로 올해보다 595억원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6,503억원, 특별회계는 1,575억원이다.

시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업민생 4법’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 등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대응 등 제도 개선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사진)이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업민생 4법’은 △사적 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무력화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당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이날 국회에서 ‘농업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민중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2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국내 법률로는 최초로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두루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11월 소통의 날 개최… 양오봉 전북대 총장 특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소통의 날 행사에서 도정 운영 현황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기관·기업·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김 지사의 소통 시간에도 이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의 명사 초청 특강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협치를 통해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왔다”며, “전북과 전북대가 협력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1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반 지역혁신 사업(RIS),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그리고 글로벌대

학 30 선정 등 지역혁신과 교육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이러한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전북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양오봉 전북대학교총장이 “대학-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농업민생예산 증액 요청

이원택·윤준병·임미애 의원 등,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쌀값 안정·생산비급등 지원 등 위해 증액 필요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군산·김제·부안),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정읍·고창),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



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

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략작물직불금, 식량원조, 비매입자 급이차보전, 농업재해보험 등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박정 위원장은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으며 “증액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니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간사 또한 “현재 예산안등조정 소위원회에서 증액심사를 하는만큼 건의한 예산증액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8일 제 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과 임종훈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명이 질의자로 나섰다.

먼저 차남준 부의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소

통의 날 행사를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한 의안심의회도 이루어졌다.

고창군 예산결산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차남준 의원),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과,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건의 의안 총 41건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끝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5일 7차 본회의에서 심덕섭 고창군수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며,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고창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